

광주매일신문



제9051호 대표전화 (062) 650 - 2000



2025년 11월 18일 화요일 (음력 9월 29일)

'무안국제공항 조기 정상화' 광주·전남 공동 대응 나서야

♪심층분석

광주공항 국제선 임시취항 갈등

광주시 "재추진" vs 국토부 "불가" 고수 '2018년 통합 협약' 뇌관 재점화 우려 ↑ 전남・무안 등 돌리게 하는 고립된 전략 대통령실 TF 가동전 협력 의지 꺾일 수도 '서남권 항공망' 근본 재설계 여론 꿈틀

무안국제공항이 제주항공 참사 이후 11개월 째 '폐쇄' 상태인 가운데 광주시가 '광주공항 국 제선 임시 취항' 카드를 다시 꺼내 들면서 역설 적으로 '서남권 항공망'의 근본적 재설계 여론까 지 고개를 들고 있다. ▶관련기사 3면

광주시의 주장은 당장 발등의 불인 '시민 불 편'과 '경제 피해'를 해소하겠다는 명분이지만, 이 카드는 수면 아래 잠겨 있던 광주-전남-무안 간의 해묵은 갈등, 즉 '2018년 공항 통합 협약'이 라는 뇌관을 정면으로 건드렸다는 지적이다.

'임시 취항'이라는 단기적 실리를 쫓는 광주시 의 행보가 '군공항 이전'이라는 장기적 대의를 흔들고 있다는 비판과, '죽어가는 경제를 외면 말라'는 반박이 정면 충돌하며 불필요한 갈등 양 상을 빚고 있다.

◇명분은 '긴급성'…장벽은 '현실성'

광주시가 지난 4월 1차 신청 반려에도 불구하 고 국제선 임시 취항 재추진을 공식화한 결정적 계기는 국토교통부가 '2025년 동계 항공 일정'(2 026년 3월까지)에서 무안공항을 완전히 제외했



초겨울 날씨…수북이 쌓인 낙엽 수거

17일 오전 광주 북구 운암동 문화예술회관 인근 가로수길에서 북구청 청소행정과 직원들이 낙엽이 배수관로로 유입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전동 송풍기를 이용해 인도에 쌓인 낙엽을 수거하고 있다.

기 때문이다. 내년 3월까지 호남권 하늘길이 공 식적으로 막힌 셈이다.

광주시는 무안공항 정상화가 기약 없는 상황 에서 약 2천억원의 매출 손실 등 고사 직전인 지 역 관광업계와 시·도민의 불편을 더는 외면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현실의 벽은 높다. 우선 주무 부처인 국 토교통부가 '불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국가 공항 정책'(무안 통합)과 '부정기편 허가 원칙' 에 어긋난다는 것이다.

국제선 운항에 필수적인 CIQ(검역·세관·출입

국) 시설 구축도 난제다. 광주시는 4억-5억원이면 충분하다고 주장하지만 관계 부처 기준을 맞추려 면 최소 20억원 이상이 든다는 반론이 팽팽하다.

더 큰 문제는 '시간'이다. CIQ 설치에는 최소 4 -5개월이 소요된다. 수십억원을 들여 시설을 완 공할 때 쯤엔 무안공항이 재개항할 수도 있다는 '실익 없음'의 논리가 광주시가 내세운 '긴급성' 의 명분을 무색하게 한다.

◇갈등의 본질은 '2018년 협약' 파기

표면적인 기술, 행정적 문제보다 더 심각한 난 제는 '신뢰의 붕괴'다. 이번 사태의 본질은 2018

년 8월 광주시·전남도·무안군이 체결한 '광주 민 간공항의 무안국제공항 통합 이전' 협약이 '사실 상 파기' 상태에 이르렀다는 데 있다.

전남도와 무안군의 시각에서 광주시의 이번 '임시 취항' 요구는 '시민 불편'을 명분 삼아 광주 공항 국제선 기능을 '존치'시키려는 전략 아니냐 는 해석을 만들어낼 수도 있다.

특히 대통령실 주관 '광주 군공항 이전 TF' 가 동을 앞둔 민감한 시점에 터진 이번 논란은 전남 도와 무안군의 협력 의지를 근본적으로 꺾어버 릴수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

◇일부시민단체 '공항이원화' 만지작

역설적으로 무안공항의 기능 마비 사태와 이 번 '임시 취항' 논란은 '서남권 항공망'의 근본적 인 재설계 요구를 수면 위로 끌어올렸다.

무안공항 참사 과정에서 드러난 국제표준 미 달의 콘크리트 구조물이나 '활주로이탈방지시 스템(EMAS)' 미설치 등 심각한 안전 문제, 그 리고 개항 이래 지속된 40%대의 저조한 탑승률 등 총체적 실패가 부각됐기 때문이다.

극히 일부이긴 하지만 광주지역 시민단체를 중 심으로 "'안전하지도, 가깝지도, 이젠 열리지도 않 는'무안공항으로 광주공항을 통합하라는 기존 논 리는 설득력을 잃고 있다"는 주장을 제기한다. "광 주공항은 여객 중심으로 부활시키고, 무안공항은 화물 물류 특화 공항으로 발전시키자"는 '공항 이원화' 주장까지 공론화하려는 모양새다.

전문가들은 "광주시의 이번 승부수가 '보여주 기'에 그치든, '실리'를 위한 포석이든, '새로운 판'을 짜야 한다는 공감대를 형성시킨 것만은 분 명해 보인다"며 "문제는 신뢰가 완전히 무너진 상태에서 복잡한 방정식을 다시 풀어야 한다는 점"이라고 지적했다.

지역 정가의 한 관계자는 "광주시의 '임시 취 항' 요구는 국토부, 전남도, 무안군 모두를 적으 로 돌리는 고립된 전략"이라며 "광주시가 임시 취항 요구를 즉각 철회하고 '무안공항 조기 정상 화 및 서남권 항공망 복원'을 위한 광주·전남 공 동 대응을 제안하는 게 순리에 맞는 공항 정책' 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 관계자는 "대통령실 주관 TF 등 상위 레벨의 논의기구에서 '2018년 협약'을 대체 할 새로운 '서남권 항공망 마스터플랜' 수립을 공식 제안해야할 필요성도 있다"고 덧붙였다.

/김진수기자

대의원·권리당원 투표 반영 비율 1대1로

민주당 공천를 개정안

더불어민주당이 내년 6월 지방선거 공천룰과 관련, 대의원과 권리당원의 투표 반영 비율을 동 일하게 1대1로 변경하는 당헌·당규 개정에 돌입 한다. 현재는 대의원과 권리당원 투표 반영 비율 이 20대1 미만이었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17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 위원회의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을 안건으로 하는 전당원투표를 오는 19-20일 진행한다고 밝혔다.

地選 경선 후보자 4인 이상일 경우 권리당원 100% 참여 예비경선 실시 2차 본선에선 권리당원·국민 50%씩 50% 넘어야 후보로…결선투표 도입 19-20일 전 당원 투표 진행 후 확정

하는 방안은 정 대표가 대표 경선 공약으로 내건

당원주권주의 정책의 핵심이다.

정 대표는 "강력한 개혁 당 대표로서 당원주 권시대, 1인 1표 시대를 열겠다는 전대 때 약속을 실천하겠다"며 "나라의 선거에서 국민 누구나 1 인 1표를 행사하듯 당의 선거에서도 누구나 1인 1표를 행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1인 1표제 등에 대한 보완점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정 대표는 "예컨대 한국노총과 전략 지역에 대한 배려의 경우 표로서 하지 않고 대의원이든 권리당원이든 1인 1표제를 행사 다른 정책 배려를 통해 충분히 하겠다"고 말

지방선거 경선 후보자가 4인 이상일 경우에는 예비경선을 시행하는 규정도 신설했다. 예비 후 보자 검증위원회를 통과한 후보는 누구라도 경 선을 치를 수 있다.

예비경선의 경우 권리당원 100% 경선으로 진 행된다.

이와 관련, 정 대표는 "당원이 전면적으로 참여해 당의 후보를 공천하는 '열린 공천 시스 템'을 도입하겠다"며 "예비 후보자 검증을 통 과한 후보는 누구라도 경선에 참여시키겠다. 몇몇 힘 있는 인사가 공천권을 좌우하던 폐습 을 끊어내겠다"고 투명한 경선 방침을 재확인

구체적으로 예비후보자 검증위원회를 통과한 예비후보가 4인 이상일 때는 권리당원 100% 참 여로 1차 조별 예비경선을 치르게 된다. 이어 2

차 본선에서는 권리당원 50%와 일반 국민 50% 선호 투표제를 통해 50% 이상 득표자를 후보 로 결정하는 '결선 투표제'를 도입한다.

기초·광역의원 비례대표 선출 방식도 변경할 예정이다.

현재는 각급 상무위원이 비례대표 순위를 선 정하지만, 개정안에 따라 권리당원의 100% 투표 로 순위를 선정한다. /김진수기자

Today

광주 도심 '노인보호구역' 관리 '사각'

"삼성전자 '獨플랙트' 광주공장 추진" 12면

박찬호이탈…KIA 유격수공백어떻게? 16면



+